일본 검찰의 쇼와전공 사건 수사에 관한 소고

김 원 치*

목 차

Ⅰ. 전후의 정치상황과 사건의 배경
1. 정치상황
2. 사건의 내용과 배경
Ⅱ. 수사과정 및 처리결과
1. 수사과정
2. 처리결과
Ⅲ. 재판결과
1. 구리스 루트 공판
2. 아시다 루트 공판
3. 히노하라 루트 공판
Ⅳ. 사건의 성격
1. 정치적 음모 여부
2. 검사와 정치인의 싸움
Ⅴ. 검찰사적 의의
1. 알선 수뢰죄의 신설
2. 검찰 독자수사의 계기 마련

Ⅰ. 전후의 정치상황과 사건의 배경

1. 정치상황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배는 정계나 검찰조직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에 뒤이어 맥아더 원수의 연합국최고사령부(GHQ)[1]가 일본을 통치하게 되었다.

* 변호사, 전 창원지검장

1) 공식명칭은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로서 GHQ또는 SCAP로 불린다. 1945년 9월 설치되어 1952년 4월 28일 대일강화조약・미일안전보장조약 발효에 따라 폐지될 때까지 약 7년 동안 일본을 점령 통치했던 기구로서 최고사령관 맥아더를 정점으로 4부(部),

같은 해 10월 시데하라 키주로(幣原喜重郎) 내각이 들어섰다. 맥아더는 치안유지법 등 일련의 반민주 법령의 폐지 및 민주화와 인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집회 결사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여건이 조성되어 잇따른 정당 결성이 이루어졌다.

즉, 1945년 11월 2일 일본사회당 결성[가타야마 데스(片山哲) 서기장]에 이어 일주일 후인 11월 9일 보수정당인 일본자유당[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총재]이 결성되었다. 다시 일주일 후에 일본진보당[마치다 주지(町田忠治) 총재]도 결성되었다. 한편 GHQ가 시행한 일련의 민주화 정책은 선거제도에도 영향을 미쳐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져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고 각 정당의 출범을 계기로 시데하라 내각은 1945년 12월 18일 중의원을 해산했다. 다음해 1월말 선거에 앞서 GHQ는 1946년 1월 4일 공직자 추방령을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과거 전쟁 전 또는 전쟁 중 활동했던 지도자들이 대거 타격을 받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진보당 소속 274명 중 무려 260명이, 자유당 43명 중 30명이, 사회당 17명 중 10명이 추방되었다. 구질서의 청산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 정책은 GHQ의 민정국(GS: Government Section) 차장 케이즈(Charles L. Kades) 대령이 주도하는 이른바 '뉴딜파'가 수행했다. 이러한 점령초기의 민주화 정책은 일본 공산당을 포함한 혁신세력을 부상시켜 정치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 공직 추방령은 검찰조직의 세력 판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종전 당시의 검사총장인 나카노(中野竝助)를 위시하여 특히 지금까지 검찰의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이른바 사상・공안파 검사들은 과거 일본 군국주의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주요 직책에서 밀려났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 수행이 최우선의 국가정책이었던 시절에 공안업무를 맡고 있던 우수한 인재들이었다.

예컨대 종전 당시 도쿄지방재판소 검사국 검사정이었던 사상・공안

9국(局)으로 조직되어 일본군 무장해제, 재벌해체 등 일련의 민주화 정책을 시행했다.

파의 기시모토(岸本義広)는 종전 후 사포로 공소원 검사정으로 좌천되었고 그 자리에 경제・특수검찰계열의 도쿄공소원 검사 기우치(木内曾益)가 임명된다.

1946년 4월 10일, 패전 후 최초의 총선이 실시되어 하토야마(鳩山一郎)가 이끄는 일본 자유당이 141석을 획득하여 제1당이 되었고 진보당, 사회당은 각 94석, 공산당은 5석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혁신 내지 중도주의 정권을 기대했던 GHQ의 의도와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유당 총재 하토야마가 공직추방으로 물러나고 외무대신이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가 총재에 취임하고 드디어 5월 22일 자유 진보 양당연립의 제1차 요시다(吉田茂) 내각이 출범했다.

그 후 시행된 중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가 시행된 결과 사회당 143, 자유당 131, 민주당 121, 국민협동당 29, 공산당 4석으로 일본사회당이 제1당이 되었으나 과반수를 넘지 못해 1947년 6월 1일 사회, 민주, 국민협동 3당 연립의 가타야마 데쓰(片山哲) 내각[2]이 탄생했다. 연립정당 중 민주당은 일본진보당 계열로 선거 1개월 전에 구성되어 아시다 히토시(芦田均)를 총재로 설립된 정당이다.

그 후 가타야마 내각은 일본사회당 내의 좌우세력 대립으로 스스로 무너져 1948년 2월 10일 총사직하고 1948년 3월 10일 민주, 사회, 국민협동 3당 연립의 아시다 히토시(芦田均) 내각[3]이 탄생하였다. 뒤이어 같은 달 15일 일본자유당은 민주당의 일부 의원을 영입하여 요시다를 총재로 민주자유당을 결성하였다.

---

2) 가타야마 데쓰(1887～1978)는 아카야마 현 출신의 변호사로서 대중법률상담소를 개설하는 등 법률의 민주화에 노력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노동, 소작쟁의 등 해결에 노력, 사회민중당 서기장이 되었으며 패전 후 결성된 일본사회당의 서기장이 되어 1947년 6월 총리에 취임했다.

3) 아시다 히토시(1887～1959)는 교토부 출신으로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다가 패전 직후 하토야마 등과 일본 자유당 결성에 참여했고 헌법제정회의의 중의원, 제국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쇼덴 사건으로 수상직 사임 후에도 정치를 계속하였다.

이처럼 당시의 정치상황은 정당의 이합집산이 심하였고 GS는 요시다 정권 및 자유당을 기피하여 중도정권을 지지하였으나 가타야마 내각은 8개월 만의 단명으로 끝나고 다시 아시다 내각이 탄생하는 등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쇼덴 사건은 이러한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통치시기에 당시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배경으로 일어난 정계 오직사건이다.

2. 사건의 내용과 배경[4)]

쇼와전공, 이른바 쇼덴(昭電) 사건은 화학비료회사 쇼와전공이 전후 부흥금고의 융자를 받기 위하여 정계에 다액의 뇌물을 주었다는 사건이다. 원래 쇼와전공은 1939년 초대사장 모리(森矗昶)가 모리(森) 콘체른내의 쇼와비료와 일본전기공업을 합병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전쟁 이전에는 폭약의 원료인 암모니아, 비행기 기체에 꼭 필요한 경금속인 알루미늄 제조 등으로 군수산업의 스타로 부상했으며 패전 후에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화학비료산업으로 변신하여 살아남았다고 한다.

그런데 제2차 대전의 패배로 일본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자 일본 정부는 1946년 10월부터 대기업 중심으로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큰 국가기간산업 재건계획을 수립하여 석탄, 철강, 비료공업을 경제부흥의 중점산업으로 선정하고 융자대상산업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민간자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1947년 부흥금융공고(復興金融公庫)를 개설했다. 부흥금융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우편저금, 간이보험 등 자금으로 그것을 인수, 그 대출창구를 일본은행에 설치했다. 따라서 기간산업 회사에서는 부흥금 융자획득을 위해 필사적으로 정계, 관계에 손을 쓰고 있었다.

쇼와전공은 당시 융자를 받은 기업 중 하나였다. 쇼덴에 대한 융자는 1946년 11월에 6억 엔, 1947년 9월 5억 엔, 같은 해 12월 12억 엔 등

4) 藤永幸治, 『特捜檢察の事件簿』(現代新書), 講談社, 1998, 43-44면.

도합 26억 8,000만 엔에 이르렀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융자금의 용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주로 적자 메우기에 이용되어 부흥금융공고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 융자금의 회수계획이 유명무실해져 빌려준 쪽도 받을 생각을 않고 빌린 쪽도 돌려줄 생각이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융자를 에워싼 부정의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게 되었다.

특히 당시 일본을 통치하던 GHQ는 모리(森)콘체른의 모리일가를 쇼와전공의 경영진에서 추방하고 정계의 막후 거물이었던 스가와라(管原通濟)의 의제 히노하라(日野原節三)를 새로운 사장으로 옹립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GHQ와 정・재계의 배후에서 은밀한 공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다.

즉, 부흥금고 융자는 대장성, 상공성 등 심사와 더불어 GHQ의 허가가 필요한데다 히노하라 사장의 취임 직후 GHQ를 상대로 연일 화려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1948년 3월 총리 지명전에서 공작금의 일부가 쇼와전공에서 흘러나왔다는 의혹이 있었다.[5]

드디어 1948년 4월 27일(쇼와 23년) 중의원 부당재산 거래조사 특별위원회의 비밀회의에서 민주자유당의 다카하시(高橋英吉)가 "쇼와전공의 히노하라(日野原) 사장이 아시다(芦田均) 수상, 구리스(栗栖越夫) 전 대장대신 등과 공모하여 쇼와전공을 빼앗고 이 쇼와전공에 대해 17억 엔의 융자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해 수억의 정치헌금이 있었다."라고 폭로하였는데 이것이 수사의 단서가 되었다.

5) 魚住 昭,「特捜檢察」, 岩波新書, 2004, 80면.

Ⅱ. 수사과정 및 처리결과

1. 수사과정

쇼덴 사건은 일본 검찰사에서 도쿄지검 특수부가 발족된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 수사는 당초 경시청 수사2과에서 내사를 진행했고 하다노(秦野章) 수사2과장(후에 경시총감, 법무대신)이 지휘했다. 1948년 5월 25일 당시 아카사카(赤坂)에 있던 쇼덴 본사에 대하여 비료의 부정유출 등 물가통제령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까지 한 바 있었는데 그 후 GHQ의 지시로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되었다. 왜냐하면 GHQ와 쇼와전공의 유착관계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GHQ로서는 수사정보가 계속 누설되는 경시청의 수사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경찰관계자 및 GHQ 내부에 쇼와전공으로부터 화려한 접대를 받은 자가 있어 경찰이 사건 수사를 얼버무린다는 등의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도쿄지검은 바바(馬場義續) 차장검사의 지휘 아래 방대한 압수서류를 검토한 결과 경리부정과 아울러 정계와 관계에의 증뢰사실을 확인하였다.

검찰은 히노하라 사장의 비서 스나하라(砂原季也)의 노트에서 발견된 관계 공무원에 대한 50,000엔의 증뢰사실을 근거로 같은 해 6월 23일 히노하라 사장을 체포하였다. 그러나 히노하라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가와이 노부타로 검사는 1억 수천만 엔이나 되는 사용처 불명의 돈을 발견하고 그 대부분이 상무인 후지이(藤井孝)로부터 히노하라에게 교부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히노하라 사장으로부터 자백을 받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6)]

6) 가와이 노부타로, 『검찰독본』, 법무부, 2004, 21면 이하.

쇼덴 사건에서 나는 보조검사가 되었는데 장부를 전연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를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장부만 검토하면 되겠다는 조건으로 참가했지만 분식의 내용을 규명하던 중 수법이 교묘하고 복잡하였으므로 손을 뗄 수 없게 되고 결국 사용처 불명의 돈 1억 5,000만 엔이 나왔다. 그러나 그 사용처 불명금이 어떻게 처분되었는가.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히노하라(日野原) 사장을 조사토록 명령을 받아 부득이 이것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2개월 정도 경시청과 검찰청이 수사하였지만 아무리 하여도 밝힐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회사 사장에게 "당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너는 무엇인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느냐, 했다면 이야기 해 보라."고 말 하여도 입을 열지 않은 것이다.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점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 등 전연 이야기가 안 된다. 사용처 불명금이 여차여차 하다. 이러한 것이 나왔다. 그것을 밝히라 하면 "도대체 얼마가 됩니까?"고 피의자가 반문하므로 나는 "나는 말씀드릴 수 없다. 유도신문이 되기 때문에"라고 대답한다. 그런 대답으로 이삼일 소비했다. "당신은 이것을 자백하면 쇼덴 사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고, 자백하지 않더라도 사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만큼 정치문제, 사회문제가 된 사건이므로 당신에게는 이것을 밝혀줄 사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한 후 이야기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어서는 의혹을 밝히지 않고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고 유유히 설득하였다. "하룻밤 생각토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더니 다음날 아침 "그러면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니시오(西尾末廣)에게 얼마, 후쿠다(福田越夫)에게 얼마, 구리스(栗栖越夫)에게 얼마, 오노(大野伴睦)에게 얼마, 시게마사(重政誠之)에게 얼마 등등으로 증뢰, 정치헌금, 국회의 논의를 가라앉힌 데 대한 대가, 변호비용, 금융기관관계, 관청관계 등 모두 진술했다. 너무나 사건이 커서 수사하는 쪽이 놀랐다. 조서를 증뢰자마다 1통씩 작성했다. 이번엔 구리스 다케오(栗栖越夫) 대장대신을 체포하여 수사했다. 그랬더니 그는 또 여러 곳에서 수뢰한 사실을 자백했다.

쇼와전공의 증뢰공작은 주로 제3차 융자 때인 1946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히노하라의 자백으로 전 대장대신 구리스(栗栖越夫) 체포에 이어 수사가 국무상 니시오(西尾末廣)에게 이르자 아시다 수상은 총사직을 결의하였다. 니시오는 아시다의 연립정권 구성원이며 부총리를 지낸 사회당 의원이었는데 히노하라로부터 돈 100만 엔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 수사는 더욱 확대되어 수상 아시다(芦田均)를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아시다의 피의사실은 쇼와전공과 직접 관련된 사실은 아니었지만 1947년 11월 16일 제재업자(製材業者)인 오카 나오키(岡直樹)로부터 돈 100만 엔을 받은 것이다. 당시 오카는 정부의 납품대금 지연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하니 조속히 정부가 지불하도록 부탁을 하고 이에 아시다는 그 업무를 맡고 있던 구리스 장상과 전재부흥원(戰災復興院) 총재에게 소개하여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다. 검찰은 아시다의 체포를 결의하고 2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체포장을 청구했고 중의원이 12월 7일 도쿄지방재판소의 체포 허락요구를 허락함으로써 아시다는 구속되었다.

당초 아시다의 체포 시기와 관련하여 검찰은 고심을 해야 했다. 왜냐하면 아시다의 체포 시기가 국회해산이 예상되는 시기와 맞물린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회기 중 체포된 경우 내각을 경유, 국회의 허락을 구해야 하나 해산이 빨리 이루어지면 국회의 허락 청구 없이 바로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놓고 검찰의 의견은 둘로 나뉘어졌다. 즉, 해산 여부에 관계없이 바로 청구하자는 후쿠이(福井盛泰) 검사총장의 안과 부결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국회의 해산을 기다리자는 일선 검찰의 안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국 2개의 의견을 GHQ 당국에 제출하여 일임했고 국회심의에 붙여져 140 : 120의 근소한 차로 통과되었다고 한다.[7)]

이 수사과정에서 히노하라가 구치소 직원에게 뇌물을 주어 편의를

부탁한 촌극도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도쿄고검 차석 등 2명의 검사가 쇼덴과 관계가 있다는 의혹으로 사직했다.

2. 처리결과

이 사건의 수사기간은 1948년(昭和 23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7개월에 이르렀고 검거된 자는 현직 대신 1명, 전 대신 2명, 현직 국회의원 6명, 전 국회의원 3명, 공무원 10명, 은행원 8명, 쇼와전공 사원 7명, 관련회사원 21명, 기타 6명이다. 이 가운데에서 43명이 기소되고,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내렸다. 특히 현직 총리대신 아시다의 기소 여부에 관하여 가와이 검사는 자신의 고민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고 있다.[8]

>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 나는 전후 특히 미군 점령하에서 총리대신을 체포, 구류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것이 과연 적당한지 어떤지 그 여부에 관해서 대단히 고민하고 상사의 의견 혹은 선배의 의견 등을 타진했는데 이만한 자백이 있고 사실과 증거가 나온 이상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으므로 결행하기로 했다. 성공하면 당연하고 실패하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나는, 검사는 때로는 피의자에게 치명상을 입혀 사회적 생명을 빼앗는다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당연히 그리하여야 하며, 자기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실패한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지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사건 기소와 관련하여 당시 검사총장 후쿠이(福井盛太)가 미키(鈴木義男) 법무총재에게 니시오 부총리에 대하여 기소하겠다는

7) 魚住 昭, 앞의 책, 107면 이하.
8) 가와이 노부타로, 앞의 책, 24면.

청훈(請訓)을 했을 때 미키는 검사총장과 도쿄고검장을 뺀 채 전국 7개 고검 검사장을 모아놓고 기소 여부에 관한 협의를 했다고 한다. 다만 당시 비밀회의였으므로 진상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니시오가 미키와 같은 사회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휘권 발동을 고려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이 있다. 그러나 결국 검찰은 니시오를 기소했다.

Ⅲ. 재판결과

공판은 구리스, 아시다, 히노하라 세 그룹으로 분리하여 심리되었는데, 현금 수수의 동기 및 현금의 수수와 직무권한과의 관련성 여부가 초점이었다.[9)]

1. 구리스 루트 공판

첫째 그룹인 구리스 루트는 구리스가 흥업은행 이사 기타 대장대신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련회사로부터 기밀비를 제공받은 범죄사실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리스 그룹의 판결은 62회의 심리 끝에 1952년 10월 20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선고되었는데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었다. 즉 대장대신 구리스는 수뢰 및 경제벌칙정비법 위반[10)]으로 징역 1년 6월, 비서관 미쓰모토(三ツ本南彦)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구리스에게 증뢰한 니혼건재 사장 다케다(武田安轉), 나가우치 상선 사장 나가우치(中內幾太郎) 등에게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니혼제염 사장 오자와(小澤專七郎)는

9) 노무라 지로(野村二郎)/지명철 역, 『일본의 검찰』, 사닥다리, 1994, 143면 이하.
10) 법률의 정식 명칭은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로서 1944년 2월 10일 법률 제4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4월 20일 시행되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 선고되었다.

2. 아시다 루트 공판

둘째 그룹인 아시다 루트는 당시 아시다 총리가 겸직 중인 외무대신 겸 부총리, 종전의 연락 사무국 총재의 직무와 관련하여 납품대금 편의를 둘러싸고 수뢰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시다 그룹의 판결 선고는 같은 해 10월 22일에 열려 아시다, 오카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아시다의 무죄 이유는 직무권한과 관련 없이 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공판에서는 수뢰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직무와의 관련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즉,「내각법(內閣法)」제4조 제3항의 "각 대신은 안건의 여하를 불문하고 내각 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 각의(閣議)를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검찰은 "각 국무대신의 직무권한의 범위는 행정 사무 전반에 걸쳐 개별적・구체적 사항에도 권한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하여 오카의 청탁에 의하여 각의 결정에 참여한 행위 자체가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각은 국가의 행정사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며 개별적 구체적 사무는 내각 스스로 처리할 권한이 없다고 하여 대가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즉, 오카 피고인이 아시다 총리에게 지불해야 할 납품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행위는 개별적 구체적 행정사무이고 내각의 권한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증뢰자와 수뢰자 모두 위와 같은 청탁행위가 내각의 권한사항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있게 될 록히드 사건의 판결 이유와 비교하여 음미할 만한 부분이다.[11]

3. 히노하라 루트 공판

셋째 그룹인 히노하라 루트는 히노하라 사장 지휘 아래 쇼덴 임원들에 의한 관계(官界) 고급관료 및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증·수뢰 부분이다. 히노하라 그룹의 판결 선고는 10월 27일에 있었는데 히노하라에게는 징역 2년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부총리인 니시오(西尾末廣)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후쿠다(福田越夫) 대장성 은행국장 등 4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니시오의 변호인은 그가 사회당 간부로서 돈을 받은 것이지, 국회의원 개인으로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사회당 내부를 공작의 목표로 했다는 증거가 없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영향력을 고려한 개인에게 청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후쿠다의 무죄 이유는 부흥금융금고의 융자가 부흥금융금고의 전권에 관한 것이고 대장성 은행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유였다.

한편 국회에서의 무마공작을 위하여 니혼비료 이사장(전 농림성 차관) 시게마사(重政誠之)는 히노하라로부터 170만 엔을 받아 그 중 20만 엔을 자유당 소속 중의원 의원 오노(大野伴睦)에게, 10만 엔을 마쓰오카(松岡松平)에게 교부하였는데 증·수뢰자 3명 모두 기소되었다. 1, 2심에

11) 록히드 사건에서는 대가관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다나카 총리가 마루베니 사장으로부터 항공기 구입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행위는 총리가 항공운송사업의 인허가 등 소관사항 전반에 관한 직무를 총괄하는 운수대신을 지휘 감독한다는 점, 또한 내각의 결정과 대외경제 각료 관계회담에서 대형항공기를 긴급 수입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직무권한이 있다고 했다. 당시 록히드 사건의 변호인들은 쇼와전공 사건의 경우와 같이 "총리의 직무권한은 고도의 것으로 각의(閣議)의 방침에 따라 행정청에 분화된 업무가 방침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통합조정하는 것이며 행정의 말단사항에 대한 직무권한과는 관련성이 없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가관계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결국 독직 비리에 대한 처벌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이에 대한 일반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서는 각각 유, 무죄로 갈려 상고한 결과 시게마사와 마쓰오카는 환송판결이 내려져 1954년 5월 29일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으로 확정되고, 오노는 상고 기각되어 무죄 확정되었다. 모두 수뢰의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후 쇼와전공 사건의 재판은 상고심까지 무려 14년 6개월이 걸렸으나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없고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인 히노하라도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고 상고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또한 기소된 자 총 38명 가운데 1심 무죄 12명, 2심 무죄 10명, 상고심에서 1명 등 무려 23명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주된 이유는 수뢰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 및 '직무관련성'의 해석에 관한 문제였다. 즉, 그것은 법률해석상의 견해 차이 때문이었지, 사실인정의 문제는 아니었다.

Ⅳ. 사건의 성격

1. 정치적 음모 여부[12)]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이 아시다 내각을 쓰러트리기 위하여 행한 정치적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판결이유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즉, 검찰의 처분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공명한 태도로서 정치적 음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이 정치적 음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은 믿을 만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12) 魚住 昭, 앞의 책, 91면 이하; 후지하라 아키라 외, 「일본현대사」, 도서출판 구월, 1993, 70-71면.

또한 당시 GHQ 내부 인사의 회고록이나 관련 자료 등에 의하여도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래 아시다 내각은 가타야마 내각이 붕괴된 다음 1948년 3월 10일 GHQ 민정국의 지지에 의해 민주당의 아시다 히토시(芦田均)를 총리로 민주・사회・국민협동의 3당 연립에 의한 내각이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GHQ의 초기 민주화 정책, 즉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혁신 내지 중도주의 정권 실험은 정치 불안을 가중시켰고 국민은 보수정권인 요시다 정권을 탄생시켰으나 정정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GHQ의 지지 속에 탄생된 전후 최초의 중도주의 정권인 가타야마 내각이 8개월의 단명으로 끝났으나 정권은 자유당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아시다의 연립내각 탄생으로 이른바 '정권 돌려먹기(政權たらい回し)'가 행해진 것이다.

그런데 GHQ 내부에서 점령정책의 전환을 둘러싸고 아시다 내각을 지지했던 민정국(GS: Government Section)과 경제 과학국(ESS: Economic and Scientific Section) 및 첩보활동을 총지휘했던 일반참모 2부(G2: General Staff Section-2) 사이에 대립이 있었다고 한다.

즉, 참모2부가 정치공작을 통해 중도정권에서 보수당 정권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쇼와전공 의혹을 확대시켰다는 것이다. 원래 GHQ에서 민정국(GS)은 정치, 행정, 법제도 등의 민주화를 진행한 부서로서 공직 추방, 신헌법 제정 등 중요 정책을 담당했으며 차장인 케이즈(Charles L. Kades) 대령을 중심으로 중도정권을 지지했고 구성원은 민간인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ESS는 재벌해체 등 경제민주화를 적극 추진한 부서로서 대기업 분할, 경영자 인선, 정부융자 배분 등 경제계에 큰 영향을 주었던 부서이다. 이에 비하여 참모2부(G2)는 정보와 치안을 담당하던 부서로서 윌로비(Charles A. Willoughby) 장군이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 구성원이 대부분 직업군인들이고 반공정책을 주장했다. 그들은 평소 GS와 ESS를 향하여 "일본을 공산주의자들에게 팔아넘긴 일당"이

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GHQ에 침투했다고 하면서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시간 낭비적(time-consuming)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는 등[13]의 비난을 하고 있었고 요시다 내각을 지지했다. 결국 이상의 사실을 정리해 보면 당시의 정치정세는 GS, ESS, 아시다 내각, 쇼와전공을 한편으로 하고 G2와 요시다 내각을 다른 편으로 하는 형국이었다. 또한 이는 과거 일본을 통치하다가 공직추방령에 의하여 추방당한 관료, 군인, 재벌 등 구지배층과 GS에 의하여 새로이 등장한 신지배층과의 대립현상이기도 하였다. 결국 쇼와전공 사건은 참모 2부가 민정국과 경제과학국을 궁지에 몰기 위하여 벌인 GHQ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참모 2부에서 당시 케이즈 민정국 차장의 신변을 철저히 감시하던 중 쇼와전공 사장 히노하라와 민정국, 또한 아시다 내각과의 유착을 포착하여 경시청으로 하여금 내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GHQ 내부의 각 부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달랐다. 원래 GS와 ESS는 일본 민주화 정책의 양바퀴 역할을 한 부서로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으나 이 사건에 관한한 이해관계가 대립되었다. ESS는 경찰에 대한 수사압력을 통하여 사건 수사를 뭉개버리려 하였는데 GS는 이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 했고 한편 G2는 공산주의자들을 내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 사건 수사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경찰수사 도중 민정국(GS)측에서 쇼덴으로부터 금품 및 고액의 접대를 받은 자가 있었다는 점, 또한 경찰관계자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및 경시청으로부터 수사정보가 쇼덴에 흘러들어간다는 소문이 퍼지자 GS의 케이즈 차장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찰에서 수사할 것을 명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즉, 당시 케이즈 차장은 경시청을 정치적 성향으로 보아

13) 김정기, 『전후 일본정치와 매스미디어』, 한울아카데미, 2006, 103면.

매파인 요시다 및 G2의 앞잡이로 생각하고 이 사건이 자신을 함정으로 빠트리려는 음모로 보아 검찰에 사건 수사를 넘기게 한 것이다. 어떻든 아시다 내각의 붕괴에 이어 케이즈 민정국 차장은 검찰수사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였지만 여성 스캔들 사건으로 실각되어 1949년 5월 본국으로 귀환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듯 그 후 케이즈는 20년 후 「週刊新潮」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자신을 축출하고 아시다 내각을 실각시키려는 음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 바 있고, 아시다는 그 후 "검찰청이 나를 정계로부터 매장하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정계를 떠나면 수사를 않겠다."는 의사도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함으로써 정치적 모략이 있음을 강조했다.[14] 그는 공판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고 한다.

> 검찰청이 체포장을 발부하기 10일 전에 다나카(田中伊三治) 씨를 개입시켜 담당검사가 나에게 회담을 구하여 "정계를 은퇴하면 사건수사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는 말을 했다.

어떻든 쇼와전공 사건은 아시다 내각이 탄생(1948. 3. 10)한 직후인 1948년 3월 15일 자유당과 민주당 탈당자들이 민주자유당을 결성하는 등 정정이 계속 불안한 상황에서 아시다 내각의 중도 연립정치에 실망한 국민여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쇼와전공 사건으로 아시다 내각이 붕괴하고 점령 초기 GHQ의 중도주의 정권 실험도 실패함으로써 1948년 10월 19일 탄생된 민주자유당의 제2차 요시다 시게루 내각이 성립한다. 마치 정치적 음모설을 뒷받침하듯이 요시다 내각은 GHQ와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아 1954년 12월까지 6년에 걸친 장기집권을 하게 된다.

---

14) 魚住昭, 앞의 책, 82-83면.

2. 검사와 정치인의 싸움

이 사건은 검찰수사로 내각이 붕괴된 세 번째 사건이다. 재판결과는 전체 기소인원 38명 중 무려 23명이 전원 무죄가 됨으로써 결국 검찰이 패배했지만 그것은 직무와의 관련성에 관한 법 해석상의 의견 차이였고 정치인들이 돈을 받은 사실은 전부 인정됨으로써 정계, 관계, 재계의 유착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단죄하였다는 점에서 그 검찰사적 의의는 크다 하겠다. 더욱이 일본 검찰사상 처음으로 현직 수상을 체포, 기소함으로써 검찰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과 정치의 싸움은 법정에서만이 아니고 법정 밖에서도 이루어졌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가와이 검사는 조사를 받았던 국회의원으로부터 인신공격을 받았다. 즉,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 자민당 부총재 오오노(大野半睦)가 보석으로 석방되어 "옥중옥외방담"(獄中獄外放談)이라는 제목하에 「文藝春秋」[1950년(昭和 25년) 7월호]에 투고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 고수게(小菅) 구치소에서 가와이 검사의 수사를 받으면서 그 검사에 대하여 "너의 형은 고향에서 어망(漁網)의 암거래를 하고 있다는데 왜 형을 구속하지 않느냐."고 일갈했더니 가와이는 힘없이 침묵해 버렸다.

그런데 가와이 검사의 형은 이미 작고했지만 농업에 종사했고 그러한 어망의 암거래 같은 것은 전혀 한 사실이 없으며, 또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들은 일도 없었다.

이에 격분한 가와이 검사는 당시의 사토(佐藤藤佐) 검찰총장과 바바(馬場義續) 검사장으로부터 "반박문을 써서 검찰의 위신과 검사의 신뢰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을 뿐 아니라 주위의 권유로 자신이 쓴 원고를 최고검의 총무부장으로 하여금 가필 정정한 후 문예춘추사와 교섭하여 다음달 호에 그 반박문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15]

당신의 문장은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신은 옥중에서 나의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쇼덴 사건을 국회에서 문제삼지 않도록 자민당 측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만 엔을 받았다.”고 자백했을 때는 책상 위에 엎드려서 엉엉 소리 내고 울면서 “나의 정치생명도 이것으로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는가요. 그 사실을 잊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나의 형까지 들추어내서 어망을 암거래했다고 가공날조의 사실을 선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Ⅴ. 검찰사적 의의

1. 알선 수뢰죄의 신설[16]

이 사건 판결 당시에는 수뢰죄의 경우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게 한 이른바 알선수뢰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아시다 총리에 관한 범죄 사실은 자신에게 청탁한 업자를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전 대장대신 등에게 소개하고 그 사례비조로 현금 200만 엔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행위가 자신의 직무가 아닌 타인의 직무라는 이유, 즉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당시 100만 엔은 현재의 가치로 계산하면 약 100배에 해당하는 1억 엔 정도의 금액으로서 아시다 총리가 받은 200만 엔의 돈은 파격적인

15) 가와이 노부타로, 앞의 책, 144면.
16) 藤永幸治, 앞의 책, 50-51면.

것이었다. 따라서 이는 일반인의 법감정과는 상당히 괴리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아시다 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을 계기로 1958년에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알선수뢰죄(제197조의4)가 신설되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타 공무원에게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게 한 경우,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알선하거나 또는 하게한 것의 보수로서 이를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 처벌하도록 되었다.

다만 이 규정에 대하여는 "청탁을 받은 부정행위"라는 제약 때문에 그 성립 범위가 좁다는 허점투성이 규정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그래도 이러한 규정 자체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유로 성립되었다고 한다.

2. 검찰 독자수사의 계기 마련[17]

이 사건은 동경지검 특수부의 성립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GHQ 점령하에서 1차적 수사권한을 경찰에 뺏긴 검찰이 그 제도적 약점을 극복하고 독자수사의 계기를 마련한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의 검찰특수부는 1947년 11월 1일 설치된 '은퇴장 사건 수사부(隱退藏事件搜査部)'의 후신이다. 즉, 패전 후의 혼란에 휩쓸려 은닉된 육해군 및 정부관계기관이 가지고 있던 물자를 둘러싼 부정사건의 적발과, 수사를 목적으로 발족되었는데 그 후 1949년 5월 14일 도쿄지검에서 정식으로 특수부로 발족된 것이다.

원래 GHQ는 일본의 중앙집권적 국가기구의 분산, 해체를 계획하여 사법성과 내무성을 해체함으로써 검찰과 경찰 쌍방의 권한을 약체화할 것을 시도했다.

1947년 검찰이 재판소에서 분리되었는데 「검찰청법」 제6조 제1항은

17) 藤永幸治, 앞의 책, 178면 이하; 魚住 昭, 앞의 책, 100면 이하.

"검찰관은 어떠한 범죄에 관하여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2항에서 "검찰관과 타법령에 의해 수사의 권한이 있는 자와의 관계는 형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또한 경찰은 각 지방자치체에 분할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1차적 수사권한을 둘러싸고 전쟁 이전의 구 「형사소송법」에서처럼 수사권을 독점하려는 검찰과 독립적 수사권을 가지려는 경찰과의 싸움이 전개되었는데 이 문제는 주로 경찰 측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즉, 경찰은 조직의 존망을 걸고 GHQ 상층부에 적극 공작을 전개했다.

반면에 검찰은 자신이 중심이 된, 임의로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독자의 수사기관을 만들려고 하였다. 즉,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의 범죄수사 부분(사법경찰)을 그 외의 부분(행정경찰)에서 떼어내어 검찰 직속의 조직으로 하는 안을 GHQ에 제출했다.

그러나 GHQ 민정국(GS)은 검찰권이 강화된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GHQ는 미국식으로 검찰관을 법정에 가두는 방안, 즉 이른바 "검사는 법정출입문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했다. 이른바 공판전종론(公判專從論)으로서, 결국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찰관을 공판입회에만 한정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 후 여러 절충 끝에 현행형소법(1949. 1. 1. 시행)상 경찰이 제1차적 수사권한을 획득한 것이다. 즉, "사법경찰관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에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하는 것으로 한다."(제189조 제2항)라고 규정했다.

다만 공판유지를 위한 한도 내에서 검찰관에게 보충적 수사권한을 인정하였다. 즉, 「형소법」 제191조에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당초 검찰은 「검찰청법」 제6조를 근거로 자신을 중심으로 자유로이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독립적 수사기관을 타협안으로 제출했는데 이 타협안에는 특수부 발족의 복선이 있었다.

첫째, 지금의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에 분할한다.

둘째, 중앙에 최소한도의 규모, 잘 훈련되고 장비가 좋은 국가경찰기구를 설계하여 국가적 범죄, 즉 국회의원의 선거위반 등 공안범죄, 정치가 및 고급관료 등의 권력비리범죄를 수사한다.

셋째, 위 경찰기구는 미국 FBI가 사법성에 소속된 것처럼 일본에서도 사법성 즉 검찰에 소속시킨다는 이른바 일본판 FBI 설치안이었다.

즉, 이를 종합하면 경찰을 지방자치체에 분할시키면서도 중앙에 최소한도의 국가경찰을 만들어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및 고급관료의 오직 등 국가적 범죄를 수사하게 하고 그 경찰기구는 미국의 FBI가 사법성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법무성(검찰)에 소속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이었다.

그런데 이 안도 결국 GHQ의 GS와 경찰측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판 FBI는 검찰권의 강화와 직결되고 이는 중앙집권국가의 해체라는 GHQ의 당초 목표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결국 검찰은 경시청이 빠진 채로 이른바 '한쪽 폐의 비행[片肺飛行]'[18]을 강화하여 검찰 복권의 기회를 맞게 되었고 이 사건 수사의 성공으로 특수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즉, 이 사건 수사 종결 5개월 후 특수부가 설치되었다. 당초 일본판 FBI 구상을 부정했던 GS가 특수부 설치를 인정한 것은 쇼와전공 수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수사능력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며 이후 검찰의 지방분권화 논란도 사그라졌다.

그런데 쇼덴 사건 수사 중 1948년 9월에 GS의 케이즈 차장이 쇼덴 사건의 수사를 검찰만이 하도록 검찰총장에게 명하였는데, 이는 신「형사소송법」시행 4개월 전의 일이었다. 이후 중요 오직 사건에 대한 검찰의 독자수사가 활발히 전개된 것이다. 즉, 법규정의 한계를 실무능력과

18) 魚住昭, 앞의 책, 104면.

관행으로 극복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특수부 설치의 태생적 한계는 이후 검찰의 힘을 스스로 위축시켰다는 비판도 있다.[19] 즉, 보수정권의 탄생에 이바지한 검찰은 이후 보수정권의 부패를 철저하게 추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정치인의 탈세를 적발하더라도 검찰은 그것이 보수 자민당 정권의 붕괴에 이르지 않도록 신경을 썼는데 이는 자민당 정권의 붕괴가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본능적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미소의 냉전체제하에서 검찰은 GHQ 등 정치권과 일정 정도의 정치적 거래를 교환하면서 검찰조직의 자립성과 영향력을 강화시켰으나 권력비리사건 수사가 결국은 보수정권의 존속을 전제로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투고일 2007년 7월 26일, 심사일 2007년 7월 31일, 게재확정일 2007년 8월 6일)

주제어 : GHQ(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공직추방령, 부흥금융공고(復興金融公庫), 도쿄지검특수부, 가와이 노부타로(河井信太郎), 아시다 히토시(芦田均), 처분청훈(處分請訓), 수뢰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 알선수뢰죄, 은퇴장사건수사부(隱退藏事件 搜查部), 공판전종론(公判專從論)

19) 魚住昭, 앞의 책, 114-115면.

[Abstract]

A Study on the Japanese Public Prosecution's Investigation of the Showa Denko Case

Won-Chi Kim*

Showa Denko Case is the incident where a Japanese chemical fertilizer company, Showa Denko, offered enormous bribe to the political circles to have the loan of money from Local Government Capital Development Grant which was established after the end of a war.

During the investigation of this incident, the incumbent Prime Minister, Ashida Hitoshi, was placed under arrest and the Cabinet collapsed, and it became the 3rd case among 5 cases where the Cabinet collapsed through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fter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Japan.

It is officially known that the investigation started on this incident from the exposure of a member of the Diet however the received opinion is that it was rather led by political conspiracy based on the secret feud for power within GHQ which ruled Japan at the time. In other words, Ashida Administration at the time was the coalition cabinet of three parties including Democratic Party, Socialist Party, and National Cooperation Party which claimed to stand for centrism and it was being upheld by GS (Government Section) within GHQ, and the G2 (General Staff Section 2) within GS

* Lawyer

caused this incident by apprehending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deputy director of GS, Colonel Charles L. Kades and the president of Showa Denko, Hinohara.

In this incident, 43 out of 60 people who were subjected to investigation were prosecuted, it took 14 years and 6 months until the trial at the Supreme Court, and most defendants including Prime Minister Ashida were given a verdict of "not guilty" and the reason was that it was not the matter of admitting the truth but that it was not relevant to their duties.

This has great meaning in terms of the history of prosecution and investigation.

Concerning Prime Minister Ashida was found innocent for his act of accepting the money for connecting the supplier to the minister in charge of the related business was not related with the Prime Minister's duty, and the Influence Peddling Act was newly established in order to correct such irrationality.

Also, the prosecution which was deprived of the primary investigative right to the police after the war found an opportunity for independent investigation and established the Special Investigation Division under Tokyo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In other words, the police began the investigation of this incident however the subject of suspicion, Kades of GS distrusted police investigation and ordered the prosecution to investigate in order to prove his innocence, and the reason the Special Investigation Division was established only in 5 months after the investigation for this case closed is that GHQ rated the investigative capacity of the prosecution high.

However, some criticized that the prosecution could not thoroughly investigate the corruption of the conservative politicians who ruled the political circles of Japan afterwards due to the inherent limit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Division of the prosecution which contributed to the birth of the conservative government.

Key Words : GHQ (General Headquarters of the Allied Powers), Purge Directive, Local Government Capital Development Grant, Special Investigation Division under Tokyo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Kawai Nobutaro, Ashida Hitoshi, Request for Instructions for Disposal, Relevance to Duty Concerning Influence Peddling, Influence Peddling